

# 한국환경회의

## 보도자료

일 자	2019. 10. 31	담당자	한국환경회의 (정규석, 010-3406-2320)
수 신	각 언론사 정치, 사회, 환경, NGO 담당기자		
제 목	[보도자료] 2019년 국회 국정감사 모니터링 결과 발표_한국환경회의		

[2019년 환노위(환경분야) 국정감사 모니터링 결과 발표]

### 한국환경회의, 2019년 환경분야 국정감사 모니터링 결과발표

- 현장 모니터링, 자료 취합, 녹취록 분석, 평가 워크숍 등 진행

- 42개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2019년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문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방유역환경청을 비롯해 각 산하기관 국정감사, 환경부 종합감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현장 모니터링,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 취합, 녹취록 분석, 평가 워크숍 등을 통해 최종 모니터링 결과를 도출했다.
- 한국환경회의는 2017년,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국정감사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BEST 의원과 WORST 의원을 선정한 바 있다. 하지만 2019년 모니터링 결과 예년과 같은 평가는 무의미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국정감사에 임한 국회의원들의 수준은 20대 국회 국정감사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챙기기가 두드러져 국정감사 취지 자체를 훼손했다고 여겨진다.
- 국정감사는 행정부의 정책입안, 정책결정, 정책집행 등 전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로 국회의 역할 중 첫 번째로 꼽힌다. 하지만 한국환경회의의 2019년 환경노동위 환경부문 국정감사 모니터링은 현행 국정감사 제도의 근본적 한계를 분명히 확인한 계기였다. 자질이 떨어지는 국회의원을 걸러내기 위한 장치로서도 상시국정감사로의 전환은 절실하다. 한국환경회의는 이번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통해 상시국정감사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 한국환경회의의 2019년 국정감사 모니터링은 일회성으로 국회의원을 평가해서 이슈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국정감사의 엄밀하고, 확고한 원칙과 취지를 환기하기 위함을 밝힌다.

※ 붙임 자료\_ 2019년 국정감사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총 13매 끝.

2019년 10월 31일  
한국환경회의

## 2019년 국정감사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분야)

2019년 10월

# 한국환경회의

The National Network of Environmental Organization of Korea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  
구소,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  
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영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서울환경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예  
코부터, 여성환경연대,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라마생명공동체, 인천녹  
색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  
회,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  
교육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환경정의, 카라

## 1. 평가 취지

- 국정감사는 국회가 행정부의 정책과 행정실행 능력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것이 목적임. 하지만 국회의원의 말꼬투리 잡기, 막무가내 호통 등 정책과 행정에 대한 감시보다 일회성 기획 행사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가 적지 않음. 국정감사가 행정과 정책에 대해 제대로 된 감사가 되도록 의원과 행정기관을 감시하는 것은 시민사회영역의 중요한 역할임.
- 정권 교체 후 세 번째로 열리는 2019년 국정감사는 국정과제 이행사항을 평가하고, 과도기에 접어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점검할 수 있는 자리로 환경부가 정부 출범과 함께 표방한 환경정책과제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계기임. 더욱이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로 국회의원들의 역량과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 한국환경회의는 2017년에 이어 세 번째로 의정 감시 활동의 하나로 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분야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였음. 그 목적은 두 가지로 국회가 국정감사에서 부여받은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과 환경부를 비롯한 행정기관이 정책 방향을 제대로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임.
- 시민사회영역의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통해 해당 상임위 의원의 책임감을 높이고, 책임 있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견인하고자 함. 또한, 환경부 역시 국정감사를 통해 부실한 환경 행정을 개선하고, 부정부패에 대한 관리·감독, 정책의 개선 등을 촉구하고자 함.

## 2. 평가방식

### 가. 모니터링 과정

- 한국환경회의(정책소위원회) 국정감사 모니터링단 모집 \_9월
  - 한국환경회의 소속단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단 모집
  - 5개 단체 10명으로 구성
- 국정감사 모니터링단 사전 워크숍 \_10월 1일
  - 국정감사 의의, 진행 과정, 한국환경회의 국감모니터링 경과 등 교육
  - 모니터링 방법과 평가 방법 공유
- 국정감사 모니터링(현장 국감질의 녹취 및 기록) \_10월
  - 유역·지방 환경청 및 홍수통계소 : 10월 10일, 국회 상임위원회실 현장모니터링
  - 수자원공사를 비롯한 산하기관: 10월 14일, 국회 상임위원회실 현장모니터링
  - 환경부와 기상청(종합 국감): 10월 18일, 국회방송 모니터링
-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 취합 (10월)
  - 현장모니터링 참여, 당·의원 홈페이지
- 종합 평가 워크숍 (10월 23일)
  - 정성평가(질의 태도, 질의주제 적정성 등) 중심으로 정량 평가(정책자료, 보도자료 등)를 참고해서 진행
  - 모니터링단의 속의 과정으로 평가 확정

### 나. 정책자료 및 질의내용 통계

- 정량평가를 위하여 국정감사 기간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의 보도자료, 정책자료 등을 취합함.

- 각 자료는 환경 분야 주제에 한하며 당 및 의원 홈페이지, 의원실 개별 연락 등을 통하여 취합된 자료로 종합 평가 시 위원 평가의 참고자료로 사용하였음.

〈표 1. 위원별 보도·정책자료〉

소속	의원	보도자료	정책자료집	합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5	0	5	
	김태년	0	0	0	
	설훈	10	0	10	
	송옥주	14	0	14	
	신창현	19	0	19	
	이용득	3	0	3	
	전현희	12	0	12	
	자유한국당	임이자	4	0	4
		강효상	4	0	4
문진국		1	0	1	
	신보라	0	0	0	
	이장우	0	0	0	
바른미래당	김동철	3	0	3	
	이상돈	1	0	1	
정의당	이정미	20	0	20	
합계		96		96	

### 3. 환경노동위원회(환경 분야) 의원별 평가

- 한국환경회의는 2017년,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국정감사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BEST 의원과 WORST 의원을 선정한 바 있음.
- 하지만 2019년 국정감사 모니터링 결과 예년과 같은 평가가 무의미하다는 판단을 내림. 20대 국회의 2019년 국정감사는 전반의 수준이 현저히 낮아 국정감사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결론임. 구체적인 개별 사안은 아래와 같음.

#### 가. 준비 부족이 여실히 드러난 국정감사

- 2017년 국정감사에서 환경노동위 국회의원들이 발표한 환경부문 보도자료와 정책자료집 총합은 145개 였음. 2018년 국정감사에서는 60개로 크게 줄었고, 올 국정감사에서도 96개로 차이가 현격함.
- 국정감사를 염두에 두고 발표하는 보도자료와 정책자료집의 숫자로 국정감사 준비의 충실성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함. 같은 주제를 쪼개서 발표하는 경우도 흔하고 내용상 내실을 기했다고 보기 어려운 자료도 다수인 상황임.
- 하지만 5개 이하의 보도자료를 발표한 의원이 전체 15명 중 10명에 달한다는 점은 20대 환경노동위 국회의원들이 2019년 국정감사에서 의제발굴과 발굴된 의제를 공론화하는 과정을 소홀히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나. 정체성을 잃어버린 환경노동위 국회

- 국정감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게 되어 있음. 따라서 1년에 한 번 행정부처의 정책과 행정집행을 감사하는 것으로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의원으로서는 허투루 임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님.
-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이익을 대변하고 강변하는 등 부적절한 행태를 보이는 국회의원이 다수 있었음. 주지의 사실이지만 국회의원은 지역구, 비례를 막론하고 지역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지역구인 대전 동구의 대청호 주변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 문제를 관할 환경청장에게 질의하고 질타하는 것으로 수차례 질의시간을 사용함.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을 거론하며 환경규제의 부당함을 강조하고,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 문제에서 땅값 문제와 규제 완화를 강조하는 등 환경노동위 국회의원으로서는 부적절한 태도를 보임.
- 자유한국당 입이자 의원은 지역구로 염두에 두고 있다고 알려진 청송의 면봉산 풍력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함. 물론 육상풍력발전이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획득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중요한 문제지만, 관련 자료(육상풍력환경성평가지침)를 벗어난 억지로 객관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질의 태도를 보인 것은 적절하지 않았음.
-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지역구는 아니지만, 양평 용담1지구의 난개발 문제에서 현재 규제조건으로는 개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사업자들

이 쪼개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하며 개별 조건을 달아서 개발을 허용하는 것을 관할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안함. 합리적인 대안 제시로 포장했지만 결국 환경노동위 위원이 개발사업에 조건을 달아 거래를 하라는 제안을 한 것임. 이는 환경노동위 의원으로서는 결코 용인할 수 없는 행태임. 편법 개발행위가 예측되는 상황이라면 관할 환경청장에게 환경 관점에서 명확한 법 집행 의지와 실행방안을 주문했어야 함.

- 이외 다수 의원이 해당 지역구의 민원해결사를 자처하며 국정감사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임.

## 다. 국정과제 점검과 현안이 실종된 국정감사

- 이번 국정감사에 다룬 의약품 폐기물 문제, 제주도 환경 훼손 문제, 새만금 문제,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문제, 남북환경협력 문제 등 이번 국정감사에서 거론된 문제들은 분명히 지적하고 점검받아야 할 의제임. 하지만 국정 운영 3년 차에 돌입한 행정부를 대상으로 국정과제 중심의 점검과 1년에 단 한 차례 진행되는 국정감사의 위중함을 전제 한 국정 전반을 아우르는 의제는 확연히 부족했음.
- 문재인 정부 환경정책의 핵심은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임.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비롯한 법제도 정비, 불필요한 댐 줄임, 통합물관리 안착,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로드맵, 대기오염을 비롯한 유해 화학물질 문제 해결, 에너지 전환을 위한 환경정책 추동 등 2019년 국정감사에서 환경부가 점검받고 토론을 통해 도출해야 할 입법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2019년 국정감사는 그야말로 ‘맹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만큼 실종된 의제가 수도룩함.

- 특히 해당 국정감사의 맥락을 짚어내고 견인해야 할 환경노동위 소속 각 정당 간사의원들의 질의내용이 아쉬웠음.
-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지난 2017년과 2018년 BEST 의원으로 선정된 근거인 탄탄한 질의 준비, 현장감을 살린 의제 이해력과 질의 소화력 등을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여실히 보여줌. 특히 의약품 폐기물 문제 등에서 보여준 날카로움이 돋보였음. 하지만 여당 간사의원으로서 현 환경부의 환경정책 전반의 맥을 짚고 큰 틀에서 환경부 국정감사를 의제 중심으로 견인하는 모습은 부족했음.
-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큰 그림은 고사하고 면봉산 풍력발전사업 문제, 영농폐기물 방치 및 침출수 문제, 의성 쓰레기 산 문제, 의성군 폐기물 처리시설 통합허가 관련, 4대강 보 개방 피해 관련 조치 등 국감 질의 키워드 대부분이 의성·청송·군위·상주 지역구 현안에 매몰되어 있었음.
-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의지, 나주 SRF 발전소, 영산강 하수처리장 증설 및 고도화, 환경부 블랙리스트 '특혜의혹', 생태자연도 전반에 대한 점검(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가습기 살균제 사태 대책, 4대강 보 개방 시 주민 피해 대책, 환경부 및 산하기관의 낙하산 인사 문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케이블카 건설 문제, 여수 산단 하수처리 시설 증강 등 전방위적인 주제들로 질의를 이어갔지만, 환경정책 전반을 점검한다기보다는 개별 민원 의제와 환경노동위 의원으로서 적절치 못한 질의가 도드라짐. 생태자연도 자체와 생태자연도 설정 과정 등 관련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환경단체들의 오랜 지적이었음. 물론 지역주민 재산권 보호 목적이 아니라

합리적인 국토관리의 기준을 고도화하려는 방편임.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케이블카 활성화를 주장하려면 우선 상임위를 환경노동위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할 것임.

#### 4. 종합평가

##### 가. 국회의원

- 2019년 환경노동위 환경부문 국정감사에 임한 국회의원들의 수준은 20대 국회 국정감사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고 평가할만함. 특히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지역구 챙기기가 두드러져 국정감사가 가진 취지 자체를 훼손했다고 여겨짐. 또 중반기를 넘은 정부의 국정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예상되는 환경정책의 과제를 도출하기에도 매우 미흡했음. 1년에 단 한 차례 진행되는 국정감사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의 불성실한 태도로 국정감사 자체에 대한 회의론을 불러올 만한 수준이었음.
- 물론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처럼 탄탄한 준비로 지하수 우라늄, 소규모 상수도 관리, 의료폐기물 처리, 영주댐 개선, 옥내 급수관 관리, 북한산 탐방로 안전, 공공기관 임원 비위 행위 대책,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책, 일회용 포장 폐기물, 지진 조기예측 인력, 기후 장기 예보 역량 강화, 기상청의 수문 업무 총괄 문제 등 다양하고 폭넓은 질의로 국정감사의 본의를 살리기도 함. 특히 작년 국정감사 의제 중 하나인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심도 있게 추적하고 지적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함.
- 전반적인 국정감사 수준 저하는 국회의원들 개개인의 잘못만이 아니라 일회성 이벤트처럼 작동하는 현행 국정감사 제도 자체가 가지는 한계점도 명확할 것임.

## 나. 환경부

-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기조실장, 각 단체장의 답변은 “노력하겠음”, “고려하겠음”, “검토하겠음” 등 상투적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현안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기에 부족했음.
- 국회의원들의 질의내용 자체가 환경부가 정부 출범 이후 표방한 환경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검증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으나, 환경부의 정책비전이 답변 내용 중 드러나지 않은 것은 환경부에 대해 아쉬운 점임. 일례로 시대적 과제인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현장에서 불거지는 주민 수용성 문제, 환경 훼손 문제 등에 있어 환경부 차원의 비전과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음. 또 국정과제 중 하나인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환경부의 의지와 이를 위한 과정의 정교함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쟁으로 치부되는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정책적 설명과 논리전개는 애당초 불가능한 상황이었음.

## 다. 개선방안 및 제언

- 지역구 챙기기와 일회성 폭로, 꼬투리 잡기 등 공방 중심으로 매몰된 국정감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지적사항 이행/개선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함. 하지만 1년에 한 차례 일회성으로 진행되는 현행 국정감사 제도로는 국정감사에서 정책적 오류를 논리적으로 밝혀내고, 사후 대책 마련을 추동하기에 한계가 분명함. 한 해가 지나면 또 다른 정쟁거리가 등장하고 여론의 추이에 따라 중요 현안의 당락이 좌우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정책 감시와 점검은 의제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우리나라의 국정감사는 제헌 국회부터 시작해 1972년 유신 시기 중단 후 1988년 13대 국회 때부터 부활해 현재에 이르고 있음. 하지만 매년 국정

감사를 앞두고 무리한 자료 요구, 정쟁으로 인한 국회 파행(2019년 국정감사는 ‘조국’ 국정감사라는 별칭을 얻은 상황임.) 등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30일 기한의 몰아치기식 국정감사 제도 자체가 원인임. 2019년 환경노동위 환경부문 국정감사도 이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함.

- 2014년 6월 여야는 국정감사를 ‘정기국회 전과 정기국회 기간으로 분리 시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이를 위해 임시국회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 등에 관한 법률’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지만 이후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 다시금 국정감사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몰표를 터야 함.

## 라. 총평

- 한국환경회의는 2017년부터 환경노동위 환경부문 국정감사 모니터링과 평가를 이어오고 있음. 총선을 앞둔 이번 국정감사는 사전 준비 부족, 과도한 지역구 챙기기, 전반적인 국정과제 및 정책실행방향 점검 전무 등의 이유로 20대 국회에서 진행한 국정감사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할만함.
- 이는 비단 개별 국회의원과 피감기관만의 탓으로 한정할 수는 없는 문제임. 몰아치기식으로 1년에 단 한차례 진행되는 현행 국정감사의 구조적인 한계가 근본적인 원인일 것임.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일상적인 입법부 감사 기능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 통례임. 우리나라처럼 매년 기간을 한정해 대규모 감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찾기 어려움.
- 상시국정감사 또는 정기국정감사와 상시국정감사의 병행 등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지금까지 끊이지 않았음. 하지만 입법부와

행정부의 이해관계가 제도 마련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분석임. 입법부 입장에선 상시국정감사로 국회의원들간 자질 평가가 명확히 부각되는 상황이 부담스럽다는 것임. 행정부 입장에선 현행처럼 1년에 한 번 잠깐 고생하면 될 상황에서 상시국정감사일텐 부담의 강도가 강해진다는 것임.

- 이상의 이유 모두 국민 입장에선 수용하기 어려운 사안임. 국회의원들의 자질 평가가 명확해 진다는 것은 대의정치 아래서 국민들이 더욱더 유리한 조건을 갖게되는 것이고,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의원의 감사로 인한 행정부의 부담 역시 국민들에게 불리한 사안이 아님. 결국 현행 국정감사 제도를 보완한 상시국정감사 제도의 약점은 없다고 볼 수 있음.
  
- 한국환경회의 2019년 환경노동위 환경부문 국정감사 모니터링은 현행 국정감사 제도의 근본적 한계를 분명히 확인한 계기였음. 자질이 떨어지는 국회의원을 걸러내기 위한 장치로써도 상시국정감사로의 전환은 절실함. 한국환경회의는 이번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통해 상시국정감사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함.